

이슈브리핑 vol.325 2025년 8월

ISSUE BRIEFING



전북형 좋은 일자리 창출의 첫걸음,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시작하자!

연구책임

김수은 책임연구위원

연구진

김민경 연구원

요약

임금 및 복지 격차가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근로자복지 증진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건강하고 안전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 의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제공하는 일터는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근로자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단위 근로자복지기금 구성에 대한 선결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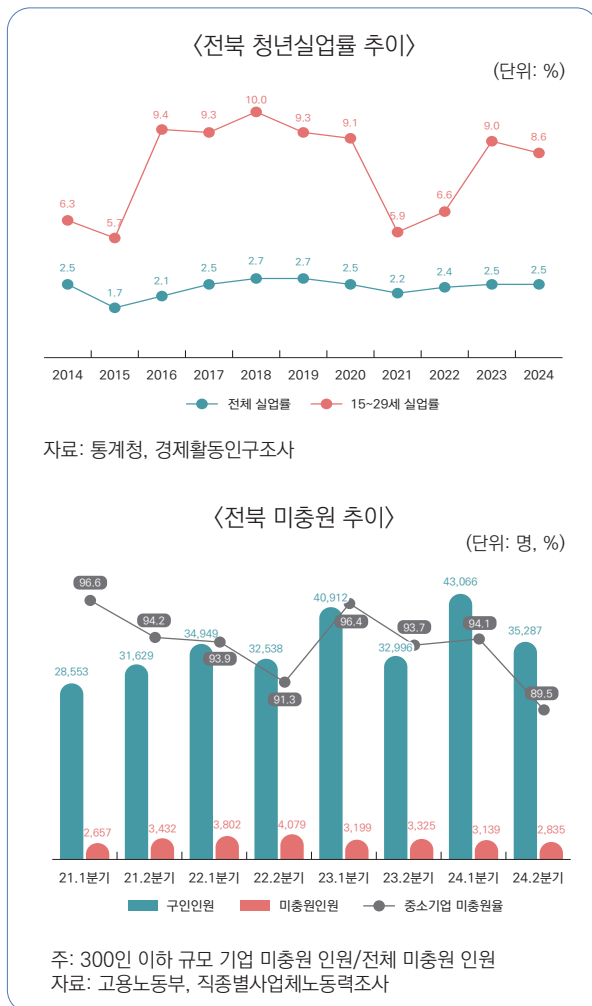
- 전북 사업장 수의 99.96%, 근로자 수의 90.4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전북경제의 중추이지만, 대기업 및 타지역에 비해 열악한 임금·복지 수준 및 근로환경으로 인해 구직자의 외면을 받아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하고 있음
- 정부는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대기업이 참여하는 원·하청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협력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지역 차원에서는 충남지역의 경우 지역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에 따른 중소기업 노동자 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완주군에서는 산업단지 근로자복지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자 작업복 세탁 지원’, ‘근로자 아침식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지역 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근로자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단위 근로자복지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함
- 첫째,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복지 실태 및 수요를 파악해야 함.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등의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근로자복지 관련 조사를 하고 있으나, 지역 근로자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활용하기 어려움. 지역 중소기업 및 근로자의 복지제도 현황, 법정외 복지제도 욕구 및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증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증진 및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정책과 연계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구성해야 함.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법정외 복지비용 지불능력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복지를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며, 대기업과 연계하여 법정외 복지를 활성화하는 것은 관련 대기업의 선의에 기대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셋째, 도내 기업의 법정외 복지제도 도입률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이 병행되어야 함. 대기업-중소기업 간 법정외 복지 격차는 공공의 지원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매우 중요하며, 참여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경영자금 지원, 정부정책과의 연계 등 종합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복지 정책이 필요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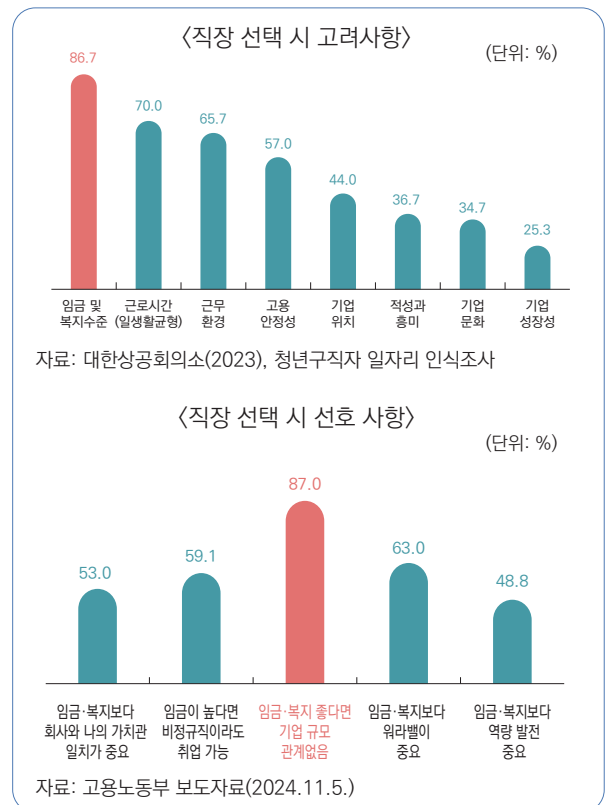
중소기업 구인난 심화

- 2024년 지역 청년실업률은 8.6%로 전년동기대비 0.4%p 감소했지만, 10년 전보다 2.3%p 증가했음
-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2024)에 따르면 2024년 하반기 기준 기업의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한 인원은 총 2,835명이며, 이 중 89.5%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하였음



중소기업 인력난 원인은 임금수준 외에도 기업 복지수준 격차에서 기인

- 대한상공회의소 조사(2023)에 따르면 청년들의 직장 선택 시 우선 고려사항은 '임금·복지'(86.7%)로 나타났음
- 다만, 청년 대다수(87.0%)가 '임금·복지가 좋다면 기업 규모는 관계없다'고 응답했음('24년 상반기 청년층 대상 채용동향조사 결과')



- 그러나 기업 규모별로 임금수준 및 복지 수준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데, '23년 기준 300인 미만 규모 기업의 임금수준 및 복지 수준은 각각 300인 이상 기업의 71.2%, 34.8% 수준으로 나타남

전북형 좋은 일자리 창출의 첫걸음,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시작하자

〈기업 규모별 노동비용 세부현황(2023년 기준)〉

(단위: 천원, %)

구 분	노동비용 ¹⁾ 총액	직접 노동비용	간접 노동비용	퇴직급여 등의 비용	법정 노동비용	법정의 복지비용	교육 훈련비용	채용 관련비용
전 규모	6,131.1	4,893.2	1,237.9	466.5	468.5	272.2	23.4	7.2
300인 미만 (A)	5,085.9	4,173.1	912.8	380.4	371.1	151.3	6.5	3.4
10~29인	4,844.0	4,038.6	805.4	324.9	349.4	127.0	3.0	1.1
30~99인	5,053.9	4,146.6	907.3	383.1	362.8	151.4	6.4	3.7
100~299인	5,449.4	4,386.5	1,062.9	450.9	411.0	183.5	11.3	6.2
300인 이상 (B)	7,531.8	5,858.2	1,673.6	581.9	599.0	434.2	46.1	12.4
300~499인	5,757.9	4,605.1	1,152.8	455.6	435.9	241.7	13.9	5.7
500~999인	6,155.9	4,880.1	1,275.7	504.3	500.9	242.9	19.3	8.3
1,000인 이상	8,276.9	6,386.2	1,890.8	629.5	660.1	526.1	60.2	14.9
A/B*100	67.5	71.2	54.5	65.4	62.0	34.8	14.1	27.4

자료: 고용노동부, 2023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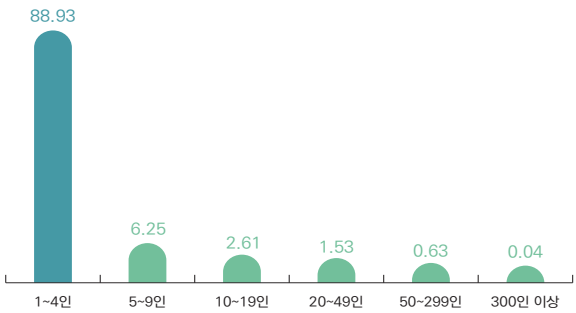
전북지역 사업체 규모 분포 및 임금수준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구인난 해결을 위한 적극적 근로자 복지정책 필요

- 도내 사업체 중 95.2%가 종사자 10인 미만 업체이며, 월평균 임금은 명목임금 345.7만 원, 실질임금 303만 원으로 전국평균의 84.3% 수준임(전국 명목임금 410만 원, 실질임금 359.6만 원)
- 전북의 경우 타지역에 비해 임금이 낮은 수준이며, 도내 상당수 기업이 영세하여 근로자에 대한 복지비용 지출이 부담되는 상황임

1) 노동비용: 기업체가 상용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
직접노동비용: 정액 급여 및 초과급여, 상여금 및 성과급
간접노동비용: 퇴직급여 등의 비용, 법정 노동비용, 법정의 복지비용, 교육 훈련비용, 채용 관련 비용

〈전북 규모별 사업체 비중(2023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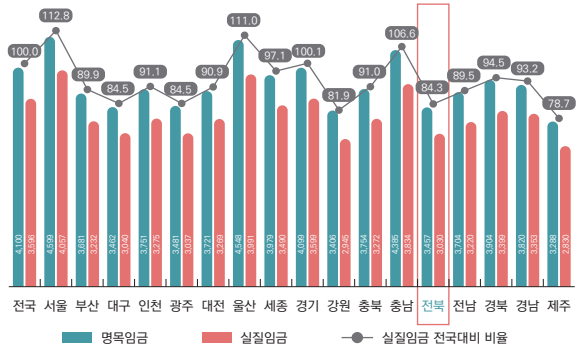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시도별 실질임금 총액 및 전국대비 비중(2023년 기준)〉

(단위: 천원, %)



주: 실질임금=명목임금/소비자물가지수
자료: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4.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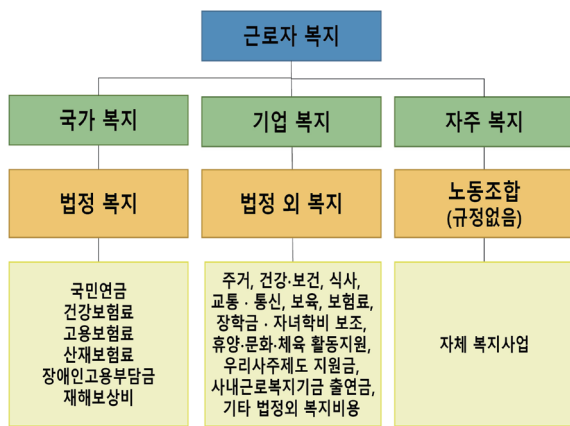


중소기업 근로자복지 개념 및 정책

1. 근로자복지 개념 및 종류

- 근로자복지는 기업에서 근로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행하는 기업 내 복지 활동으로 개별 기업 또는 개별자본이 주체가 되어 종업원과 종업원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행하는 각종 시책, 시설, 서비스의 종합적 체계를 의미함(김효선 외, 2020)
- 제공 주체와 급부형태에 따라 법정복지와 법정외 복지로 분류하며, 법정복지는 국가가 제공하며 주로 연금으로 제공하는 반면, 법정외 복지는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에서 현물, 시설, 각종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됨
- 내용별로 분류하면 법정복지는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있으며, 법정외 복지는 주택 복리후생, 금융지원, 생활복지, 교육, 의료 및 문화·체육활동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하고, 사용자 단독 또는 노사 간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됨

〈근로자복지 유형 및 내용〉



자료: 기존 선행연구를 참조하여(김효선 외, 2020; 민기채, 2021) 저자 작성

2. 근로자복지 정부 정책

- 정부는 ‘근로복지’를 근로자를 위한 일터에서의 복지 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유지·향상을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사회적 인프라로 정의함
- 근로자 대상 국가 복지정책은 「근로복지기본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 참여 확대, 근로의욕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을 2002년부터 5년마다 수립하고 있음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 ① 근로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 재산형성에 관한 사항
- ② 우리사주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에 관한 사항
- ③ 선택적 복지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 ④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⑤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⑥ 근로복지사업에 드는 자원 조성에 관한 사항
- ⑦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 ⑧ 그 밖에 근로복지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근로복지기본법」 제9조

-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2022~2026)’은 “모든 일하는 사람을 아우르는 근로복지”를 목표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 수요 대응, 규모별(대·중소)·고용형태별(정규·비정규) 복지 격차 완화, 취약계층 근로복지 안전망 강화 및 근로복지 기반시설 강화를 추진 방향으로 제시하였음

전북형 좋은 일자리 창출의 첫걸음,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시작하자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2022~2026) 추진전략 및 과제〉

추진전략	세부과제
새로운 수요에 맞춘 충충한 근로복지 지원	• 다양한 고용형태 보호 강화 • 원활한 산업 및 노동 전환 지원
대-중소 상생을 통한 기업 복지 격차 완화	• 대-중소기업 간 복지공유 활성화 • 근로복지기금제도 활용도 제고
취약계층별 근로복지 안전망 강화	• 저소득층 소득 및 생계유지 지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계층 건강 보호 • 일하는 장애인 맞춤형 지원
근로주기별 맞춤형 지원	• 사회초년생 노동시장 정착 지원 • 주거복지 지원 • 일가정 양립 지원 • 중장년 전직 및 고령자 재도약 지원
근로복지 인프라 강화	• 근로복지진흥기금 재원 확충 • 우리사주 효율화를 통한 자산형성 기회 강화 • 퇴직연금 활성화를 통한 노후대비 인프라 강화 • 근로복지 정보망 개편

자료: 관계부처 합동,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2022~2026), 2022.10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내용〉

구 분	지원대상	지원한도
사내 근로 복지 기금 지원	•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	• 지출비용의 50% 범위 내 (매년 2억 원 한도)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	• 출연금액의 50% 범위 내 (매년 2억 원 한도)
공동 근로 복지 기금 지원	• 중소기업에 포함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기금법인	• 출연금액의 100% 범위 내 (설립일로부터 최대 5년간 누적 20억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법인	• 출연금액의 100% 범위 내 (매년 최대 10억 원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 상생협약 체결 및 출연금 증액 시, 3년간 매년 최대 20억 원 한도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기금법인	• 출연금액의 100% 범위 내 (공동기금 설립일로부터 3년간 매년 최대 6억 원 한도) * 참여사업장 수 등에 따라 차등 ※ 상생협약 체결 시 상생협약 체결한 해부터 3년간 매년 최대 6억 원 한도
* (1인당 지원 한도) 기업체 노동비용조사(고용노동부)의 “300인 미만 사업장 법정 외 복지비용”의 50%를 근로자 1인당 지원 한도로 설정('21~) * (공동기금 매칭 지원율 조정 및 차등화) 심사결과에 따라 점수 구간별 매칭 지원율 차등화('22~) → ① 지원배제, ② 신청 금액의 50%, ③ 75%, ④ 100% 이내		

자료: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2024.3.14.)

3. 정부 근로복지 격차 해소 주요 사업

○ 정부(고용부)는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 간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음

-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은 2015년부터 협력업체
근로자 대상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사내기금에 지출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매년 최대 2억 원 한도로
지원

-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은 2016년부터 중소기업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기금과 대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은 중소기업
공동기금에 신청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최대
5년간 2~20억 원 한도로 차등 지원



근로자 복지증진 추진사업 주요 사례

1. 현대·기아자동차 원·하청 상생협약²⁾

» 개요

- 고용노동부, 현대·기아자동차, 중소협력사(2차) 10개 사는 자동차산업에서 ‘대기업과 협력사 간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음(2024.4.25.)
- 이 협약은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노동 약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중소협력사의 근로여건 향상이 중요하다는 것에 주목하고, 그간 경영안정, 생산성 향상 중심의 지원을 넘어 2, 3차 협력사의 근로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었음
- 원·하청사, 전문가, 정부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는 지난 5개월간 협력사 노·사 간담회(46개사), 권역별 중소협력사 설명회(20회) 등 현장의견을 토대로 과제를 발굴함
- 완성차기업뿐만 아니라 1차 협력사도 2, 3차 협력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자원 출연을 발표함

» 주요 내용

- 현대·기아자동차는 복리후생-인력양성-산업안전 등 근로여건 전 부문에 걸쳐 120여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함

〈상생협약 주요 내용〉

구분	세부 내용
복리후생	• 협력사 맞춤형 복지사업 시행 : (예) 근로환경 개선, 휴가비 지원 등 • 협력사 공동어린이집 신설 : 국내 최고 수준의 프로그램 구비

구분	세부 내용
산업안전	• 노후·위험 공정 개선비용 지원 : (예) 끼임, 화상 방지 등 자동화 설비 •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 지원 : (예) 인공지능 인체감지 시스템 등 • 지게차 등 안전설비 구축 지원
상생확산	• 1차 협력사 협력회, 2·3차사 근로여건 개선 위해 자원 출연 • 1차 협력사 상생 노력에 대한 제도개선, 인센티브 등 검토 • 2·3차사 전용 홈페이지 활성화 : 협력사 필요 정보 제공, 의견 청취 등
인력양성	• 협력사에서 장기근속한 근로자에 지원금 지급 • 협력사 우수인재 채용지원, 채용박람회 등 추진 • 산업전환 교육·컨설팅 및 지역별 방문교육 확대 • 외국인 채용 세미나 및 작업 매뉴얼 번역 지원
경영안정	• ESG·저탄소 경영 컨설팅, 기술유출 보안 관리, 해외수출 마케팅 지원 등 확대 • 스마트공장 전환, 미래차 아이템 발굴 지원 • 2·3차사를 위한 저금리 대출, 보증료 우대 등 4천억 원 규모 금융지원 지속

자료: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2024.3.14.)

2. 충남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조성³⁾

» 개요

- 충청남도의 경우 2021년 ‘노사민정 협의회’ 공동 선언을 통해 충남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였음
- 공동근로복지기금은 국내외 경기 침체와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기업 규모와 고용형태별로 임금 및 복지 수준의 차등이 두드러지는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에 따라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3) 김수은 외(2025), 「전북특별자치도 상용차산업 근로자 복지 증진 방안」 연구 내용을 발췌하여 작성

2)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4.4.25.)를 참고하여 작성



자료: 충청남도중소기업연합회 홈페이지(<https://chunggiyeon.kr>),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설명 자료」

» 주요 내용

- '24년까지 6개 법인(178개 기업, 3,153명 근로자)이 운영되었으며, '25년 2개 법인(80개 기업, 1,262명 근로자)이 추가되어 총 8개 법인(258개 기업, 4,415명 근로자)이 운영됨
- 2021년부터 51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근로자 1인당 연간 약 80~100만 원의 복지비(지역상품권)를 지급하고 있음(62.4억 원/ 국 43%, 도 10%, 시군 19%, 기업 28%)
-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 간 협력을 증진하고 대기업과 소득 격차를 줄이는 한편, 시군이 함께하고 있음

3. 완주군 산업단지 근로자복지 지원사업

- 완주군은 플랫폼 노동자, 이동노동자, 필수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관심뿐만 아니라 산업안전, 노사관계발전 등 전반적 부문에서 정책지원 기반을 마련⁴⁾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산업단지 근로자복지 및 근로환경 개선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근로자 작업복 세탁 지원사업

- 완주군은 「완주군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조례」(2023.7.13.)를 제정하고, 관내 산업단지 중소기업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작업복 세탁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음
- 세탁소를 설치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자의 복지증진, 산업재해 예방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음

» 산업단지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

- 완주군은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아침식사를 지원하고 아침식사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완주군 아침식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24.9.12.)를 제정함
- 아침식사 지원대상을 「고등교육법」 및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학교 및 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산업단지 근로자 처우 개선(건강 도모, 근로여건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4) 「완주군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 「완주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완주군 이동노동자 및 근로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완주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완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완주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완주군 근로자 작업복 세탁 지원사업〉



〈완주군 산업단지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자료: 전북도민일보(2025.3.27.), 세계일보(2024.11.21.)

IV

전북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선결 과제

-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 의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제공하는 일터는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지역 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근로자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단위 근로자복지기금 조성에 대한 선결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경기, 충남의 경우 정부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공동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함으로써 대기업과 지역 중소기업의 복지 격차 완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 고취, 고용안정 등을 꾀하고 있으며, 나아가 더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정부정책과 연계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증진 및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단위 근로자복지증진과 관련하여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전북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법정외 복지비용 지불 능력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복지를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며, 대기업과 연계하여 법정외 복지를 활성화하는 것은 관련 대기업의 선의에 기대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

전북형 좋은 일자리 창출의 첫걸음,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시작하자!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관련 조례(안)〉

구분	(1안)	(2안)
조례명	「(가칭)전북특별자치도 근로자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가칭)전북특별자치도 공동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목 적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근로복지정책 수립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역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증진 및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지원 사업을수행하기위한기금설치와 운용에 필요한사항규정
주요 내용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책무 - 재원 조성 - 근로복지증진 심의위원회 설치 - 기본계획의 수립 - 공공 근로복지 지원사업 등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신용보증, 근로복지시설, 근로자 복지 지원 프로그램 등)	- 재원 조성 - 기금의 운용·관리 - 기금의 용도 - 위원회 설치·구성 및 기능 등

»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복지 실태 및 수요 파악

○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복지 실태 파악은 단순히 현황 파악이 아니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음

○ 중소기업 근로자복지 실태는 기관별 또는 대상별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련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등의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근로자복지 관련 조사를 하고 있으나, 지역 근로자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활용하기 어려움
- 이 외에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근로자복지 관련 통계를 일부 확인할 수 있지만, 조사 내용이 단편적이어서 전반적인 복지 수준을 파악하기 어렵고 지역 근로자복지 상황을 확인할 수 없음

○ 따라서 지역 중소기업 및 근로자의 복지제도 현황, 법제 외 복지제도 욕구 및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증진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근로자복지 관련 조사 현황 및 전북 근로자복지실태조사 계획(안)〉

구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전북특별자치도 근로자복지 실태조사(안)
목적	기업체에서 상용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파악하여 기업 활동 및 근로자복지 증진 등 고용 노동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건설근로자의 고용 상황, 근로 조건, 근로 복지, 가족생활 등 전반적인 생활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 수립 및 복지사업 개선에 활용	비정규직의 규모와 유형, 근로여건 등의 파악	전북 도내 근로자의 고용상황, 근로조건, 근로복지, 가족생활 등 근로여건과 관련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정책수립 및 복지사업 발굴에 활용
대상	기업체 ('300인 미만 또는 300인 이상 기업체)	건설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기간제 등 근로 형태별 근로자	도내 임금근로자
조사 내용	임금, 퇴직급여 등의 비용, 법정 노동비용, 법정외 복지비용, 채용 및 교육훈련비용 등	일반적인 특성, 소득 수준, 고용 상황, 근로 조건, 복지 수준, 가족생활 등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퇴직급여	중소기업 특성, 임금수준, 고용형태, 근로조건, 복지수준, 가족생활 등
조사 주기	매년	매 2년	매년	매 3년

» 법정외 복지 제도 운영 중소기업 인센티브 제공

○ 기업의 복지제도는 임금효과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며, 근로자를 유인, 유입 및 몰입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기업이 지향하는 인적자원에 대한 가치와 목적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됨

- 대기업-중소기업 간 법정외 복지 격차는 공공의 지원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매우 중요하며, 도내 기업의 법정외 복지제도 도입률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이 병행되어야 함
- 참여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경영자금 지원 등을 통해 도입을 장려하고, 지역 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우수 기업으로 선정하여 채용지원 연계, 기업지원제도 가점 제공, 우선 선정 및 정부정책과의 다양한 연계 등 종합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가칭) 전북 일하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 예시〉

지원 대상	• 자체 근로자복지 확대 추진 기업 • 전북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참여기업
지원 내용	• 기업홍보 및 박람회 참여 우선 지원 • 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직원 휴식공간 리모델링 등) • 기업 R&D 지원사업 가점 지원 • 정부·지자체 일자리 지원사업 우선 연계 • 채용장려금 지원 • 그 외 기업의 성장과 고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지원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2024).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 고용노동부. (2024). 2023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관계부처 합동. (2022.10).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2022~2026).
- 대한상공회의소. (2023). 청년구직자 일자리 인식조사.
- 통계청. (2023). 전국사업체조사.
- 통계청. (2024). 경제활동인구조사.
- 고용노동부. (2024.4.25.). 현대자동차·기아 원·하청 상생협약, 2, 3차 협력사까지 확대된다!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2024.9.30.). 사업체노동력조사 및 시도별 임금·근로시간 조사 결과 [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2024.11.5.). '24년 상반기 청년층 대상 채용동향조사 [보도자료].
- 근로복지공단. (2024.3.14.).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공고 [보도자료].
- 충청남도중소기업연합회.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설명 자료. <https://chunggiyeon.kr>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복지기본법; 완주군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 완주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완주군 이동노동자 및 근로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완주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완주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완주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김수은, 이강진 & 김민경. (2025). 전북특별자치도 상용차산업 근로자 복지 증진 방안. 전북연구원.
- 김효선 & 조주복. (2020). 사회복지사의 기업복지 유형이 삶의 질과의 관계에서 직무몰입의 조절효과. 경영교육연구, 35(2), 167-186.
- 민기채. (2021). 기업복지격차 완화를 위한 법정외복지의 제도적 개선방안. 문화와 정치, 8(4), 39-71.

iSSUE BRIEFING

vol.325



발행인_이남호 발행처_전북연구원

※ 이 이슈브리핑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전북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